

“6대 핵심분야 구조개혁 통해 잠재 성장률 반등시켜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제15차 수석 보좌관 회의

李 대통령 “지금 이 구조개혁 적기 내년 韓 대전환 출발점 되도록 준비 갈등 피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돼” 겨울철 위험사업장 안전점검 주문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6대 분야에 대한 과감한 구조 개혁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잠재 성장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데 대해 재차 관계부처와 기업을 향해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지는 지금이 구조 개혁의 적기로 판단한다”면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당연한 최대 과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정부가 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필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 성장률을 반드시 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가 방치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가 없다”며 “구

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면서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의 견이 다른 건 너무 당연하고, 입장이다른 것도 당연하다”며 “다르고 갈등 생긴다고 해서 피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갈등이 대립으로 격화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닥뜨려서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 입장을 인정하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조정해 가면서 우리 사회의 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오늘이 전태일 열사 55주기다. (전태일 열사는) 반세기 전 온몸으로 부당한 노동현실을 고발하면서 산화해왔다”며 “그런데 우리의 노동현실이 가아 될 길이 아직도 멀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울산화력 붕괴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어 “제가 매일 받아보는 일보에 의

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추락사고, 또 폐쇄 공간의 질식 사고가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먹고 살자고 갔던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더이상 반복되서는 안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 인식을 근본에서 새롭게 바뀌어 된다”며 “정부는 안전 중심의 현장 관리 체계 구축에 힘을 쓰고, 기업들도 이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줄여야 될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고, 당연히 늘려가야 될 투자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들이 겨울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도 서두르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사노위가 지금 이제 겨우 구성되고 있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인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 나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금융·보험사 교육세 2배 인상… 소비자에 비용전가 우려

2025 세제개편안

수입금액 1조 초과 시 교육세 1% 업계 성장 따른 응능부담 필요성

대한상의 “年 1.3조 추가 세 부담” 업계 “실제 손익으로 기준 삼아야”

정부가 2025 세제개편안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 표준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교육세법을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보험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과 동시에 세율 인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초대형 금융사 한정해 세율 인상”

금융·보험업은 1981년 세제 도입 이후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왔다. 정부는 ‘2025 세제개편안’에서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1조원 이하분엔 0.5%의 교육세를 그대로 징수하고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0.5%포인트 올린 1%의 교육세를 받기로 했다.

정부는 1981년 약 1조8000억원이던

〈교육세의 세원별 징수액 현황: 2019 ~ 2023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국내분	금융 및 보험업자 수익금액	12,768	11,382	11,752	12,527	17,504
	개별소비세	4,548	4,403	4,349	4,044	4,501
	주세	8,437	7,333	6,083	8,649	8,218
	교통·에너지·환경세	21,898	20,401	24,964	16,692	16,272
수입분		3,448	3,409	3,882	4,523	5,011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금융·보험업의 규모가 2023년 약 138조 5000억원으로 75배 증가해 양적·질적 성장을 거뒀고, 이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금융·보험업의 담세력에 맞는 과세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2023년 기준 수익금액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로 업자는 59개로 전체 (4764)개의 1.2% 수준이고, 이들이 납부한 세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체 1조 5000억원의 81.8% 수준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밝혔다. 수익 금액 1조원 초과 금융·보험업자 중 은행은 18개, 보험은 23개, 증권·카드 등 18개 은행과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처는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7년 1조 5280억원 등 2027~2030년까지 총 6조 5666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태호 기획재정부위원회 여당 간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 인력, 특히 고등교육에 투자해야 하는데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 반발 “금융사 부담 지나치게 늘려”

추가 납세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은 금융·보험업계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은행연합회, 손해·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

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은 기획재정부에 교육세 과세표준 신설 및 세율 인상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본격적인 세제개편안 심사를 앞두고 지난 8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지나치게 늘리거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교육세는 이름과 달리 금융회사가 교육시설 확충의 혜택을 직접 누리는 것도 아닌데 기업에 부담만 지는 세금이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법 개정 시 60여 금융회사가 연간 1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게 돼 재무건전성 악화와 금리·보험료 상승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금융권 수익이 늘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서민금융 등에 의한 이자수익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실제 손익을 따져 남은 이익만 세금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바람직하

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세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성 ▲고등·평생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재정수요 확대 추세를 고려해 세제 개편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늘어날 세금이 소비자에 전가 우려도

금융·보험업을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만큼, 교육세 인상이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박수영 기재위 야당 간사는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학령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야 하는 판인데 계속 징수하는 상황”이라며 “교육세를 더 걷을 일이 아니라 줄여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 세제개편안 분석’에서 교육세율 인상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고 “교육세 부담분을 금융·보험 서비스 가격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며 “또한 서비스 가격결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강한 회사의 영향력, 가격결정 구조의 복잡성, 산업의 필수재·공공재적 성격에 따른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탄력성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교육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의 전가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與 “항명 검사 징계법” vs 野 “李 대통령 공소취소 원천차단”

‘檢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공방 지속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이 연일 공방을 벌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항명하는 검사를 징계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법으로 원천차단하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대결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정치검사

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하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제가 직접 검사 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며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 항명하는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과 파면이 가능하게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겠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내에 제출할 것”이라며 “정치 검사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수사와 조작수사의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12일)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라며 “그러나, 현

실에서는 권력층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 등 비법률적인 원인으로 인해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행사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폐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정치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중지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 중, 1심에서 중지되어 있는 3개의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

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등 3개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법 시스템을 확립하고, 검찰권이 국민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